



##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출범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 대학의 에너지 관련 교수들로 구성된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예교협)가 3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창립기념토론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서강대 이덕환 교수, 숭실대 온기운 교수, 카이스트 성풍현 교수 3인이 공동대표를 맡은 예교협은 이날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전력수급기본정책 방향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개정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예교협에는 이공계, 인문사회계 등 에너지를 전공하는 전국 57개 대학의 210명의 교수가 가입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추가 가입이 이어질 예정이다. 다음은 예교협 창립 취지문 전문이다.

###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정부 권고와 제안 도출”

국가의 백년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은 충분한 분석과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조기 대선의 여파로, 충분히 숙의되지 않은 채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초가 되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법과 제도를 초월해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목도했으며, 일방적으로 입안되고 공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8전기본)의 시행을 경험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건설 재개를 선택한 공론화 시민 참여단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라는 법질서 파괴 사태는 초래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공론화 이후 탈원전 로드맵을 성급하게 공표하여 기정 사실화 하였습니다.

최대 전력 수요를 무리하게 낮춰 잡은 8전기본의 예측은 시행 한 달도 안되어 크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겨울에 전력 수요 감축 지시가 10여 차례 발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전력 수요는 예측보다 무려 3GW를 초과하여 88.2GW가 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기후 변화 대처와 에너지 안보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자연 조건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각 나라의 국토 특성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쌀 소비량 감소로 유휴 농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적절한 비중의 농촌 태양광 발전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증대와 농민 소득 증대를 모색하는 정책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력망이 고립되어 있고, 에너지의 95% 이상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에 유리한 기저 전력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 대학의 에너지 관련 교수들로 구성된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가 3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창립기념토론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서강대 이덕환 교수, 숭실대 온기운 교수, 카이스트 성풍현 교수 3인이 공동대표를 맡은 예교협은 이날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전력수급기본정책 방향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개정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나라에서 원자력은 그런 기저 전력원의 역할을 지난 30여 년간 충실히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원전 안전에 대한 사실 왜곡에 의해 원전 위험성이 과장되어 과도한 공포와 불안이 작년 대선 정국에서 탈원전 여론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여론을 수용한 정치권에 의해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전 25기 중 11기가 현재 보수 정부 차원에서 가동 정지되어 원전의 가동률은 60% 밑으로까지 떨어졌고, LNG와 석탄 등 연료 가격은 크게 올라 한전의 전력 구입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때 경영 흑자를 구가 하던 한전의 영업수지는 작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그만큼 전기료 인상 압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화석연료 발전이 증가한 결과 우리가 대외적으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약속도 지키기 어렵게 되

었습니다.

정부는 원전과 석탄화력은 위험한 개도국형이고, LNG 발전과 재생에너지 만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진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공기와 같은 과학기술의 이기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이 엄격한 관리를 통해 극복되어 사람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이용되었듯이 원전도 그렇게 관리할 수 있으며 사실상 그간의 세계 주요국의 원전 가동을 통해 그 안전 관리 이력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석탄 발전의 미세먼지도 고성능 집진장치를 통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의외로 초미세먼지의 경우 LNG가 더 해로울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각 에너지원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에너지원의 장단점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에너지 믹



스를 결정하는 게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에 의한 에너지 정책 수립과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8전기본이 그 모태가 되는 제2차 에너지기본 계획에 위배하여 수립되었고 올해 수립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3에기본)도 그 기본 기초가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302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인사들 중에는 강력한 탈원전 주창자들이 포진해 있는 반면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토론에 임할 인사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원전과 석탄화력을 줄이고, LNG와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와 전력 정책의 중차대한 방향 전환에는 반드시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법과 제도에 따른 사회적 공론화와 책임 있는 정책적 의사 결정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근거 없는 당위가 몸통과 머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전기본이 이미 수립되었고, 이를 반영한 3에기본이 수립될 계획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기본계획의 대계가 먼저 정해지고 그 아래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에너지 정책에 국민의 감성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에너지 기술의 정확한 실체와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경제성과 효율성만 추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도 없는 것이 에너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선부르고 불합리한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은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겨줄 것이 분명합니다. 에너지 정책은 정파적·이념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국가와 국민의 미래만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화석에너지, 원자력, 재생에너지를 아우르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너지 전문가는 물론이고 에너지 정책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전공의 교수들과 함께 진지한 논의를 통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정부 권고와 제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와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를 창립합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2018년 3월 23일

에교협 공동대표 이덕환, 온기운, 성풍현